

칼럼

장기채 주필



젊은 층 부양부담 급증하는 나라

1960년대 일본이 인구과밀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디마 신도시'는 수도 도쿄 남서쪽에 위치해 있다.

한때 인구 31만을 목표로 개발된 계획도시지만 지금은 '노인들의 도시'가 되버렸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젊은 인구의 도시 유출 때문이다.

초·중학교가 잇따라 폐교했고 집값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다마시에 따르면 당초인구는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14만734명 수준이었다.

이 중 24.7%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초고령 도시다.

카네코 류이치 일본 국립사회 보장·인구문제연구소 소장은 "아키타현, 시마네현 등의 초고령 도시에서 낮시간에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노인밖에 없다"며 "고령화를 실감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극심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일본의 근저를 흔들고 있다는 말이다. 급증한 노년층 인구는 노동력 부족과 생산력 저하, 노인부양 문제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문제에 대응할 수 있었던 '기회의 시간'을 놓친 일본은 뒤늦게나마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에 국력을 쏟았다.

이는 출산·고령화가 꾸밀 것이다.

일본인구문제연구소의 분석을 보면 15~64세 생산가능 인구는 1995년을 최고점으로 이미 20년 기끼이 감소세가 이어졌다.

2015년에는 생산가능 인구가 1995년 정점대비 1000만 명 이상 줄게 된다.

젊은 층이 대다수를 차지하던 각종 아르바이트 업종들이 채용 난을 겪고 있지만 임금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직원들의 이탈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 둘째 문제도 수면위로 떠올랐다. 요양관련 종사자수는 2010년 말 현재 약 133만 명으로 10년 사이 2.4배가 늘었지만 여전히 수요 대비 크게 모자리는 실정이다. 노인의 고독사와 각종 노인 범죄도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최근 일본 내에서는 고령화 사

회로 진입하는 20년이 넘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인구절벽에 대한 경종이 울렸음에도 잘 대처하지 못했다는 자가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비판을 수렴해 "50년 후 1억 명 정도의 안정적인 인구조성을 유지 한다"는 문구를 중장기 경제·재정 운영방침에 명기하기로 했다. 경제·재정 운영의 기본 방침을 인구 구조 변화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본 사회의 큰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뒤늦게나마 '시대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평가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26년이면 20.8%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의 문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 수준과 맞물려 미래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 일본 내에서는 고령화 사

특히 우리나라는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하여 노인빈곤문제가 심각하여 노인자살률도 OECD 국가 중 최고로 높아 노후 삶의 질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사회보장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젊은 층의 부양부담 증가로 인한 세대 간의 인구고령화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전략 하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령자 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채택되고 있다.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은퇴하며,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활동적 고령화(active aging)'가 핵심 기조하고 있다.

따라서 100세 시대의 도래를 대비하여 우리사회는 고령자 고용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공동적 대응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제 늙은이는 노년기를 '여생'으로 생각하며 소극적인 인식을 버리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배우려는 도전과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 사회, 개인의 보다 다가적인 대응 노력이 모아져야 한다.

그래야 길어진 노년이 젊은이는 물론 모두에게 진정한 축복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

社說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해야

전남도가 전국 관광지 평가에서 광역지자체 '지역호감도' 우수 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여름휴가 민족도 조사' 기초 지자체 평가에선 순천시, 완도군이 '종합민족도' 전국 1, 2위를 휴식했고, 놀거리, 먹거리, 쉴거리 등 5개 요소를 평가하는 '여행자원 품종도' 부문에도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름 휴가 기간 가장 많이 찾은 곳은 바다와 해변(37%)이었으며, 바다와 해변 종합민족도는 완도군이 전국 1위로 조사됐다.

기초지자체 가운데 여수시는 '지역호감도' 부문에서 2년 연속 최우수를 차지했고 강진군은 '관광시설 부문' 최우수, 해남군은 '특산품 부문' 우수, 광양시는 '축제부문 종합 축제' 최우수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트래블아이 어워즈'는 관광정보 미케팅 플랫폼을 통한 네이버 의견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올해로 3회째다. 이와 별도로 소비자체리서치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지난 여름 휴가로 1박 이상의 국내여행을 한 1만 8

천여 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전라남도가 광역시·도·부문 종합 민족도 2위를 차지했다.

'여름휴가 민족도 조사' 기초 지자체 평가에선 순천시, 완도군이 '종합민족도' 전국 1, 2위를 휴식했고, 놀거리, 먹거리, 쉴거리 등 5개 요소를 평가하는 '여행자원 품종도' 부문에도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름 휴가 기간 가장 많이 찾은 곳은 바다와 해변(37%)이었으며, 바다와 해변 종합민족도는 완도군이 전국 1위로 조사됐다.

관광객이 여행을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인 볼거리, 먹을거리, 쉴거리를 잘 갖춘 곳을 찾는다. 전남의 그 가운데 한 곳이다. 전남도는 누구나 '관광' 하면 전남을 떠올릴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전남에서만 보고 즐길 수 있는 특화된 관광상품을 만들어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관광지로 가꿔나가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坐 坐朝問道

坐 앉을
朝 아침
問 물을
道 길

조 ▷坐(坐)은 천하(天下)를 통일(統一)하여 왕위(王位)에 앉은 것이고, 문도(問道)는 나라 다스리는 법(法)을 말함.

湖南新聞

本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리자 5층)
서울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장 이신원 회장 경제조

대표전화 (062) 224-5800
발행·편집인 겸부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제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태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방화는 반사회적 범죄로 우리 모두가 함께 막아야

얼마전 서울의 한 독서실에서는 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사람이 화재에 자신의 숙소에 방화하여 한밤중에 3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다행히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하마터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화재였다.

방화는 과실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실화와 달리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공공의 안녕질서를 극도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재산 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반사회적 강력 범

죄로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등 중형에 처하고 있으며 방화 범의 90% 이상이 겁범되고 있다

고 한다.

방화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이며, 누군가에게 가슴아픈 현실을 가져온다.

그렇다면 방화의 최선책은 무엇 일까? 우선 방화사건의 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한 화재라는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소방은 물론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예방 활동과 시민들의 철저한 감시 활동으로, 사후야생분이 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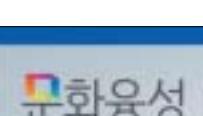
하지만 방화범죄에 대한 예방은 행정기관만의 역할만으로 이뤄 질 수는 없을 것이다.

도민들의 방화 범죄에 대한 적극적 감시활동, 빠른 신고 및 조

동조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사회 공감대 조성 및 확산과 시스템의 운영이 병행돼야 소기 목적 달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방화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더불어 관심을 갖고 쉽게 불을 지울 수 있는 쓰레기, 폐기물 등 기생성 물질을 무심코 노상에 방치하여 방화 또는 불장난의 빌미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것이 방화로부터 일상생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임동연 / 무안소방서 진압팀장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